

IV. 主要 經濟 懸案

1. 地下 經濟의 實態와 政策 課題

- (地下 經濟의 實態) 1995년 지하 경제 규모는 약 31조 원으로 경상 GNP의 8.9%로 추정됨 (Tanzi 방식)
- (地下 經濟의 問題點) 정부의 공식 통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경제 운용 정책의 교란을 초래하는 등 각종 경제·사회적 문제를 발생
- (政策的 示唆點) 지하 경제는 그 특성상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, 제도적으로 경제의 공정한 경기 규칙(rule of game)의 확립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의 축소는 가능

지하 경제 :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

추계방식으로는 현금 통화량 변화를 측정하는 간접적 방식인 Tanzi 방식이 주로 사용

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약 GNP의 9% 정도로 추정됨

- 지하 경제의 정의
 - 학자들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“정부의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활동”라고 정의할 수 있음
- 지하 경제 추계 방식
 - Gutmann 방식: 이상적인 요구불 예금과 현금 통화 비율을 정한 뒤 이를 조사 대상 연도와 비교하여 추정
 - Tanzi 방식: 현금 통화와 총통화 비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분석 → 현금 통화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지하 경제를 추정
 - 그러나 이상의 추계방식은 지하경제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에 불과함
- 한국 지하 경제의 규모
 - 1995년 지하 경제 규모는 31조원으로 경상 GNP의 8.9%로 추정 (조세연구원의 Tanzi 방식으로 추정)
 - 72년 16.6%에 비해 그 동안 꾸준히 줄고 있으나, 금융실명제 실시이후인 93년 8.7%, 94년 8.8% 보다 다소 증가한 추세
- 지하 경제의 국제 비교
 - 국제 비교 상으로 볼 때 현재 한국의 지하 경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편
 - 한국의 경우 경상 GNP 증가에 따라 지하 경제 규모

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, 선진국의 경우는 그 반대의 현상을 보임

<GNP 대비 지하 자금 추정 비율>

기관	추정 연도	비율	추정 방법
현대경제사회연구원	93년	7~11%	탄지법
한국경제연구원	86년	20~30%	탄지법
신한종합연구소	93년	20%	기존자료종합
한국개발연구원(KDI)	92년	12~39%	소득지출법
최광 교수	63~84년	12~57%(연평균)	탄지법
유일호 박사	94년	10%	소득지출법
조세연구원	95년	8.9%	탄지법

<Tanzi 방식으로 추정된 각국의 지하 경제 규모>

국 별 (연도)	미국 (1976)	독일 (1980)	스웨덴 (1978)	스위스 (1978)	오스트리아 (1985)	한국 (1995)
대 GNP 비율(%)	8~12	10.3	13.2	6.3	6.40	8.9

자료: Schneider, F. / Weck-Hannemann, H. (1986), Schattenwirtschaft, in: *Geld und Waehrung* 2, p. 32
 Franke, S.F. (1987/88), Gesamtwirtschaftliche Ungleichgewichte und Schatten-oekonomie, in: *List-Forum* Bd. 14, pp. 253 -.

지하경제의 원인은 과도한 세금부담과 정부지출의 불만족 등이 원인

- 지하 경제의 생성 원인
 - 정부의 비효율적 행정 규제와 통제
 - 각종 사회복지혜택의 존재
 - 조세에 대한 납세자의 전통적인 저항 의식
 - 불법적인 경제 활동의 존재 : 마약, 매춘 등

지하경제의 존재는 공식 통계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경제 운용의 교란을 초래

- 지하 경제의 경제·사회적 영향
 - 경제 통계의 정확성 저하와 경제 정책의 교란성 증대
 - 지하 경제 활동 종사자와 지상 경제 종사자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 발생
 - 경제적 자원이 생산성 본위로 배분되지 않고 기회 본위로 배분되어 국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
 - 지하 경제의 번창으로 인한 세입 감소는 지상 경제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

향후 우리 나라의
지하경제는 증가
가능 전망과 감소
가능 전망이 혼재

지하 경제를 줄이
기 위해서는 경제
의 공정한 경기규
칙 확립이 필요

○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향후 전망

- 증가 가능 요인
 - 사회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세 부담의 증대로 인한 탈세 유인 확대
 -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소득 구성이 근로 소득 보다 자산 소득의 비중이 증대
 - 통신망의 발달로 인한 전자상 거래의 증대와 이의 세원 포착에 관한 기술적 어려움 증대
- 감소 가능 요인
 - 경제가 발전할수록(금융개혁을 통해) 사금융의 기능이 위축
 - 국민 의식의 변화로 인한 납세 의식 개선과 부패 감소
 - 세무 행정의 전산화로 인해 세원 포착 가능성 증대

○ 지하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

- 지하 경제는 그 특성상 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, 제도적으로 경제의 공정한 경기 규칙(rule of game)의 확립을 통해 지하 경제 규모의 축소는 가능
- 민간에 대한 각종 규제 철폐
 - 자유 경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
 - 기존 인허가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며, 신설 및 운용의 합리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
- 금융 개혁의 신속한 추진
 - 우리 나라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은 私金融市場의 존재에 기인
- 과세의 공평성 유지와 세무 행정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집행
 - 과세의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
 -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세무 전산망을 확대 발전시켜 과세 대상의 누락을 최소화

(박 용 주)